

대학재정과 국가경쟁력

최 청 일 |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최근 핀란드를 방문한 한 한국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인 '대학재정과 국가경쟁력'은 우리 교육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핀란드가 1997년 19위에서 2001년에 1위, 2002년에 2위로 급상승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자는 핀란드의 이 같은 국가경쟁력 상승의 실질적 원인이 핀란드의 뛰어난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기관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창출·공급하고 있으며, 기업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상부상조 시스템의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질, 즉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총 188개 분야 중 26개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단 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국가경쟁력에 관한 각국의 순위 조사 중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분야가 많다는 것이 교육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조동성, 200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함께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치시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유현숙, 1998)에 의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고등교육 비전은 모두 국가차원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노동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영국 역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을 계획·신설 중에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 함수관계에 기초하여 고등교육 체제의 개혁의 수단으로서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경쟁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본에서도 일본의 현 대학체제로는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고등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한마디로 21세기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

〈표 1〉 스위스 IMD 평가 한국 경제의 20항목 경쟁력 평가(2000/2001년도)

1. 경제운영 성과 (13위/19위)	1.1 국내경제활력	8위
	1.2 국제무역	33위
	1.3 국제투자	37위
	1.4 고용 및 실업	9위
	1.5 물가 및 생계비	30위
2. 정부행정 효율 (33위/31위)	2.1 재정구조	9위
	2.2 재정정책	15위
	2.3 경제제도기구	34위
	2.4 기업경영환경	44위
	2.5 교육품질, 인적자원	32위
3. 기업경영 효율 (27위/31위)	3.1 생산성 향상	30위
	3.2 노동시장 여건	35위
	3.3 자금시장 효율	35위
	3.4 기업경영 관행	39위
	3.5 세계화 적응	23위
4. 발전 인프라 구축 (28위/34위)	4.1 경제 인프라	35위
	4.2 기술 인프라	25위
	4.3 과학 인프라	21위
	4.4 보건 및 환경	30위
	4.5 가치체계 문화	40위

*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도 세계경쟁력연감』, 2001. 4. 25.

나라 엄청난 교육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 과거에 고등교육은 사회적 수익보다는 사적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학은 시장 상품인 사적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성이 강한 대학교육은 전적으로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국방이라는 공공재

의 생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제경쟁시대 또는 경제전쟁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는 데 있다.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강한 기업을 건설하고,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는 국제경쟁력이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해질수록 국가가 대학에 의존하는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21세기 대학의 사명과 역할인 것이다. 대학이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그 국가가 대학에 투자하는 재정규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는 교육의 질은 '양이 질을 결정

(표 2) 스위스 IMD 평가 한국 경제의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1997~2001)

	2001	2000	1999	1998	1997	특징
국가경쟁력(종합)	28	28	41	36	30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성공, 21세기 도약 잠재력 확충 필요
경제운영 성과	19	13	38	22	21	인위적 경제활력 회복, 개방 미흡, 산업경쟁력 위기
정부행정 효율	31	33	43	42	38	정부개혁 추진, 재정 건전 노력, 정부시장 개입, 교육투자 미흡
기업경영 효율	31	27	40	35	28	노동시장 경직, 금융자문 상실, 세계화 대응 노력, 경영 투명성 미흡
발전 인프라 구축	34	28	39	38	32	과학 인프라 기술개발투자 개선, 사회응집력 방향성 불명확

* 주: 세계 49개국을 대상으로 함. **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도 세계경쟁력연감』, 2001. 4. 25.

한다'는 논리로서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고등교육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I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이란 한마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투입 요소와 제도적 여건이 있지만 이것은 Harbison(1973)의 지적과 같이 어디까지나 소극적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 자본을 축적하고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직을 만들고 국가발전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이야말로 적극적 생산 요소이다. 그 나라 국민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국민경제 내에서 효

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대학에서 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조적 인력을 풍부하게 공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력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경쟁력 가운데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MD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은 국제 수준에 있어서 최하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IMD의 2000년과 2001년을 비교 평가한 기업경영 효율의 결과를 보면 2000년 27위에서 2001년 31위로, 발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2000년 28위에서 2001년에는 34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1년도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은 총 49개국 중 28위로서 하위 그룹에 속한다. IMF 경제위기 동안 41위까

〈표 3〉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단위 : 명, 교)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전체	전문대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	전체	전문대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
'70	170,151	4,907	12,190	146,414	6,640	165	14	16	71	64
'80	597,542	151,199	9,425	402,979	33,939	345	128	11	85	121
'90	1,466,862	323,825	15,960	1,040,166	86,911	533	117	11	107	298
'95	1,889,933	569,820	19,650	1,187,735	112,728	708	145	11	131	421
'00	2,829,015	913,273	20,907	1,665,398	229,437	1,159	158	11	161	829
'01	2,946,705	952,649	21,148	1,729,638	243,270	1,236	158	11	162	905
'02	3,020,993	963,129	23,259	1,771,738	262,867	1,278	159	11	163	945

* 주 :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합한 것임.

** 자료 : 1)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0~1985. 2)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86~2002.

지 내려갔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28위로 올라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싱가포르(2위), 중국 홍콩(6위), 호주(11위)보다는 훨씬 아래 수준에 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대학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도 대학의 도움을 받아 기업 혁신을 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과 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Ⅲ. 대학교육의 현실

우리나라의 대학이 당연히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다. 예컨대 공과대학 중점지원, 우수 대학원 중점지원,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육개혁 추진 우수 대학지원, BK21과 같은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경우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지 방문

을 통한 대학평가에 의하여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등교육의 재정 여건은 양적 성장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대학재정은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입 요인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아직까지 저투자 국가에 속하고 있다(나민주, 1998).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Say's law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논리로 대학의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크게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학생 수 170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에는 3.5배, 1990년에는 8.6배, 2000년에는 16.6배, 2002년에는 3,020천 명으로 무려 17.8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학 수도 1970년 165개교에서 2002년 1,278개교로 7.7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를 주요 부담 주체로 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며, 정부의 대학설립준

〈표 4〉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추이

구분	'80	'90	'94	'97	'98	'99	'00	'01
강의실당 학생 수(명)	56.6	90.0	90.0	90.0	-	-	-	-
교수 1인당 학생 수(명)	34.8	35.4	33.9	36.97	37.84	39.99	41.23	41.55
학생 1인당 장서 수(권)	17.3	18.0	27.3	31.10	31.95	32.64	33.80	33.83
학생 1인당 건물 면적(m ²)	11.5	9.2	10.7	10.9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명)	7.6	6.6	4.8	3.9	5.58	5.60	5.71	5.85
직원 1인당 전임교수 수(명)	-	-	1.36	1.61	1.66	1.82	1.85	1.91
직원 1인당 학부 재적학생 수(명)	-	38.39	50.20	59.56	62.91	72.85	76.43	76.52
조교 1인당 전임교수 수(명)	-	-	2.90	2.50	2.65	2.69	2.38	2.22

* 자료 : 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대학교육발전지표』, RM2001-21-227호.

칙제도 역시 이러한 양적 팽창을 가속하게 하였다. 따라서 불과 30년 만에 학생 수가 17배나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으며, 정부가 이 우후죽순같이 팽창하는 대학을 모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지표로 볼 수 있는 대학교육의 여건을 볼 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의실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은 30명 이하가 대부분이나 1980년에 56.6명이었던 것이 졸업정원제 이후 1985년에는 88.0명, 대학설립준칙제 이후에는 90명을 돌파할 수준에 와 있어 선진국의 교실당 평균 학생 수의 3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대학 교실의 '콩나물 교실화'가 촉진된 것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1980년 34.8명에서 1997년에는 37명, 2001년에는 41.55명으로 이것 역시 교수당 학생 수가 10명 내외인 선진국에 비하여 엄청난 비중이다. 이러한 여건은 대학교육 서비스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장서 수,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직원 1인당 전임교수 수, 직원 1인당 학부 재

적학생 수, 조교 1인당 전임교수 수에 있어서도 1980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 대학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대학교를 이전 수준으로 정리한다는 것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자연 대학재정 배분 방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셋째,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연도별로 볼 때 대단히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1980년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19천 원에서 1995년도 1,412천 원으로 11.9배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2,362천 원으로 19.8배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도 학생 1인당 150천 원에서 1995년도 1,785천 원으로 11.9배로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무려 22.5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학교의 공교육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도 대학생 1인당 1,036천 원에서 1995년도 4,227천 원으로 4배 증가에 그치고 있고, 2001년도에는 5.8배 증가에 그치고 있어 고등학교의 22.5배 증가에 비교할 때 그 투자가 극

〈표 5〉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연도별 추이

(단위 : 천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1980	670,710	119	388,549	157	423,646	150	107,052	708	10,500	1,114	417,605	1,036
1990(a)	2,757,210	566	1,590,991	699	1,797,193	787	348,138	1,075	48,129	3,106	1,982,146	1,906
1995	5,514,754	1,412	3,425,997	1,380	3,852,559	1,785	1,317,762	2,538	83,031	4,226	5,020,952	4,227
2000	8,106,924	2,023	4,985,382	2,690	5,829,471	2,841	2,826,555	3,095	134,826	6,449	9,203,397	5,526
2001(b)	9,633,978	2,362	5,977,308	3,277	6,392,560	3,376	2,852,363	2,994	146,055	6,819	10,319,153	5,966
b/a	-	4.2	-	4.7	-	4.3	-	2.8	-	2.2	-	3.1

* 주 : 1) 국립 초·중·고등학교 제외 2) 공립전문대의 교비 제외
3) 산업대의 기성회비 제외 4) 각종학교 등은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표 6〉 대학 운영수입의 구조

(단위 : 원, %)

구분	운영수입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계
합계	8,406,618,930 (75.1)	2,133,700,539 (19.1)	252,505,727 (2.2)	406,290,522 (3.6)	11,199,115,718
전문대학	2,331,432,141 (89.4)	131,019,793 (5.0)	55,653,956 (2.1)	90,684,307 (3.5)	2,608,790,197
대학교	5,758,280,751 (70.4)	1,929,426,630 (23.6)	188,187,119 (2.3)	306,486,534 (3.7)	8,182,381,034
산업대학	299,786,586	31,594,400	5,787,225	7,649,641	344,817,852
대학원대학	13,459,511	38,860,352	2,772,527	1,416,440	56,508,830
기술대학	-	412,070	-	2,000	414,070
각종학교(대학)	3,659,941	2,387,294	104,900	51,600	6,203,735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2.

히 미미하다 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에 첨단교육 시설 및 설비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투자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재정 부담을 대부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운영의 75.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교실당 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줄이고 교수당 학생 수를 10명 내외로 하여 지금의 열악한 대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을 5~6배 더 인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대학마다 등록금을 5~6%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상상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표 7〉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율 (2002)

미충원율 (%)	전문대학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0	3	7	48	47	5	21	51	22
0~5		1		13	3	11	5	25
5~10	1	1		6		3	3	7
10~15				4		1	2	6
15~20				4				4
20~25				6				4
25~30	1	2		4	1		1	1
30~35		1		2				2
35 이상				9		1	2	1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database; 이만희, 2002.

떤 형태로든지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존재하는 한도 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앞으로 요원한 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 구조가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 의존도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즉, 대학의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밀돌 경우에는 등록금의 인상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뒤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학교육 시장에서 퇴장하여야 할 처지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시장은 이러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표 7〉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지방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우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002년도 학생 정원의 35% 이상이 미달인 대학이 지방 소재 사립 2년제 대학 9개, 사립 4년제 대학 10개, 지방의 국·공

립 4년제 대학 1개, 수도권 사립 4년제 대학 2개로 총 22개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학이 학생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 등록금으로부터 대학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Ⅳ. 대학경쟁력과 대학 재정투자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현실은 바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IM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9개 나라 가운데서 32위로 2000년의 26위보다 6단계나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은 44위(1위 핀란드, 2위 아일랜드, 3위 싱가포르)로 거의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3.6%로 39위(1위 이스라엘 9.1%, 2위 캐나다 8.8%, 3위 스웨덴 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경쟁력의 약화는 교육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투자

(표 8) 정부행정 효율부문 교육분야 평가지표와 경쟁력 순위

항목	한국	1위	2위	3위	4위	5위
교육분야 종합 순위('01)	32위	이스라엘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캐나다
총 공교육비 지출('99) (%, GDP 대비 비중)	39위 (3.575)	이스라엘 (9.061)	캐나다 (8.838)	스웨덴 (8.300)	덴마크 (8.191)	남아프리카 (8.000)
고등학교 취학률('97) (%, 해당 연령 전업학생 비율)	1위 (100.0)	벨기에 (100.0)	체코 (100.0)	일본 (100.0)	네덜란드 (100.0)	스웨덴 (100.0)
고등교육의 성취도('98) (%,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	5위 (34.0)	캐나다 (46.0)	일본 (45.0)	핀란드 (36.0)	미국 (36.0)	벨기에 (34.0)
교육시스템경쟁력('01)*	44위 (3.549)	핀란드 (7.926)	아일랜드 (7.857)	싱가포르 (7.821)	이스라엘 (7.118)	스위스 (7.023)
대학교육 유용성('01)*	47위 (3.52)	이스라엘 (8.29)	핀란드 (8.18)	아일랜드 (8.11)	싱가포르 (7.61)	미국 (7.43)
경제적 학습능력('01)*	17위 (6.03)	핀란드 (7.80)	싱가포르 (8.06)	아이슬란드 (7.50)	아일랜드 (7.18)	네덜란드 (6.92)
충분한 재무교육('01)*	28위 (4.930)	이스라엘 (8.000)	핀란드 (7.852)	아이슬란드 (7.667)	덴마크 (7.408)	스웨덴 (7.303)
자질 있는 엔지니어('01)*	36위 (6.113)	인도 (8.828)	슬로바키아 (8.769)	이스라엘 (8.588)	아이슬란드 (8.556)	헝가리 (8.545)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01)*	19위 (4.56)	핀란드 (7.68)	이스라엘 (7.35)	미국 (6.65)	싱가포르 (6.158)	아일랜드 (5.89)

* 주 : *표시는 설문 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와 평균임.

** 자료 : IMD,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2001. 4. 25.

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제정의 GDP 대비 비율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0.6%로서 OECD 국가 평균 1.2%의 절반에 불과하며, 스웨덴(2.1%)과 캐나다(1.9%)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등교육 제정의 총 공교육비 대비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14.6%로서 일본(14.3%)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며, 캐나다 (3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스웨덴 (27.3%)과 미국 (26.9%)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그 격차가 현격한 대학재정을 시장 원리에 맡기거나 대학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다.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고, 사립 대학재정의 80%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 구조로는 획기적인 대학재정 확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V. 맺는말

각국의 대학재정과 국가경쟁력의 비교 결과, 이에 관한 모든 국제지표는 대학이 국가의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질 높은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정 확보 못지 않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표 9)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비율 국제 비교(1999)

(단위 : %)

국 가	고등교육(A)	총 공교육비(B)	A/B×100
한국	0.6	4.1	14.6
미국	1.4	5.2	26.9
영국	1.1	4.7	23.4
캐나다	1.9	5.7	33.3
독일	1.1	4.7	23.4
호주	1.2	5.0	24.0
스위스	1.2	5.5	21.8
스웨덴	2.1	7.7	27.3
일본	0.5	3.5	14.3
OECD 국가 평균	1.2	5.2	23.1

* 자료 : www.oecd.org/els/education/eag2002.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인정되고,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 하는 경우에 고등교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가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재정 확보는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 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학생 부담률을 고려할 때 수 요자인 학생에게 비용을 전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경직성 고정경 비가 대부분이므로 대학의 경영합리화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대학교육의 경쟁력 목표를 설정 하고 지원하는 방안, 예컨대 현재 세계 32위에서 세계 15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이고 집중적 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부확보가 필 수적이라 하더라도 기초 단계의 교육을 희생하면서 확보할 수는 없다. 기초 단계의 교육이 희생될 경우 결국 대학교육의 질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은 국·공립대학에만 국한될 수 없고 반드시 사립대학 에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수 익사업의 운영, 기부금의 유치, 산업체로부터의 대 응자금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재원 확보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별 또는 단과대

학별 책임경영제의 도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산 과 비용에 관한 경제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OMB Circular A-21,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와 같이 대학재정 규모와 대학에 대한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재정 확보 못지 않게 대학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 투자의 중 복과 낭비 등을 걸러 주는 재정배분 시스템이 확립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 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된 여러 부처 간에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종합 조정되어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 학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고등교육재정 지원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 법에는 대학재정지원의 목표, 재정 규모, 재원 확보 방법, 재정 배분 방법, 재정 담당 기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백화점식 학 과가 나열된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을 재벌구조와 유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성화되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학문을 포괄하고 있어 역량이 크게 분산되어 있다. 대학의 특성화 없이는 대학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분야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끝으로, 고등교육시장의 대외 개방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등교육시장의 대외 개방 속도와 방법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문헌〉

- 강경석 외(1997). 『고등교육 국제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강경석(2000).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대학교육』, 제 106호
- 김박수 외(1999).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민주(1998).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대학교육』, 제 92호.
- 나민주(1998).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연구-시장논리의 적용과 재정적 경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광용 외(1998).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송기창(200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pp. 1~25.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도 세계경쟁력연감』. 2001. 4. 25.
- 유현숙 외(1998). 『21세기 고등교육의 변화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일 외(1998). 『대학교육재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연기 외(1998).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영 외.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대학교육 역량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국가인적자원비전 2005』.
- 조동성(2003). "세계 최고에 배운다(1) 산학협동의 '기술 帝國 핀란드'". 조선일보 2003. 2. 5
- 주철안(2002). "한국의 대학재정". 한국재정경제학회 제 36차 학술대회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가경쟁력』.
- 최청일(2002).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가경쟁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36차 학술대회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가경쟁력』.
- 한국교육개발원(2001). OECD 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2001).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 Bowen, H. R. (1980).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abison, Frederick H. (1973). *Human Resources as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 John, E. P. and Paulsen, M. B. (2002).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The Finance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최청일

동아대 교육학과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아대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